

김정은 시대 준법 담론과 통치기술의 전환

강채연*

이 연구는 김정은 시기 준법 담론이 어떠한 구조로 형성되고 변화하며, 그것이 북한 체제의 통치기술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은 시기 준법 담론은 단순한 법 준수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서 행위 기준을 규정하는 핵심 담론으로 크게 부상하였다. 특히 준법기풍, 준법교양, 준법의식, 법무생활 등의 하위 담론들과 결합하여 하나의 담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구조는 시기별로 결합 방식과 중심성이 변화하였다. 둘째, 집권 초기에는 주로 법 집행과 규제 중심의 의미망 속에서 등장했으나, 7차 당대회 이후에는 국가의 발전담론과 결합하며 국정운영의 규범 원칙으로 확장되었다. 8차 당대회 이후로는 일상적 생산 공간과 결합하면서 사회 전반의 생활규범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셋째, 준법 담론은 '준법교양-준법기풍-준법의식'으로 이어지는 삼중 규율 구조를 형성하며, 법 준수를 교육, 환경, 자기규율의 단계적 과정 속에서 내면화하고 시스템화하는 통치기술로 작동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 법 연구의 분석 대상을 법 제도 중심에서 법 담론의 차원으로 확장했고, 빅데이터 분석과 담론 분석을 결합하여 김정은 체제의 통치 방식을 규율 중심의 통치기술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준법 담론, 사회주의 법치국가, 통치기술, 사회통제, 규율정치, 담론 분석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

1.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통치 담론은 질서, 규율, 일상 관리를 레짐(regime) 차원으로 더욱 강화하거나 끌어올리려는 양상을 보여왔다. 당과 국가가 주민의 행위 양식 전반에서, 사회적 규범과 생활 질서를 법적 언어로 재구성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김정은 시기 북한 통치가 예외적 동원이나 위기관리에만 의존하지 않고, 일상적 통제와 규율의 제도화를 새로운 방식으로 추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목되는 현상이 법 담론의 전면화이다. ‘사회주의법치국가’ 기초를 내세워 법이 국가 운영의 핵심 기제로 강조되는 양상이다. 실제로 김정은은 집권 첫해에 전국분주소장회의(지역/단위급), 전국사법검찰일군열성자대회(중전급), 전국법무일군대회(상급)들을 순차적으로 열어 ‘사회주의 법무생활’ 강화를 체제 운영의 핵심 과업으로 제기하였다.¹⁾ 또한 ‘모범준법단위칭호’운동을 새로 도입하는가 하면, 2023년부터는 ‘전국준법교양자료전시회’ 프로그램까지 새로 개설하면서 전 국가적인 준법기풍 사회화·제도화를 추구하고 있다.²⁾ 이

1)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께서 전국 분주소장회의 참가자들과 전체 인민보안원들에게 축하문을 보내시었다,” 『로동신문』, 2012년 11월 24일;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전국사법검찰일군열성자대회 참가자들에게 서한을 보내시었다,” 『로동신문』, 2012년 11월 24일; “전국법무일군대회 진행,” 『로동신문』, 2012년 12월 6일; “제6차 법무일군대회 진행,” 『로동신문』, 2017년 10월 16일; “제7차 전국법무일군대회 진행,” 『로동신문』, 2022년 9월 16일.

2) “〈전국준법교양자료전시회-2023〉 진행,” 『로동신문』, 2023년 8월 28일.

속에서 이른바 법 준수를 교육하고(준법교양) 태도화하며(준법기풍), 이를 다시 내면화하고(준법의식) 일상화하는(준법생활) 담론 체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때문에 ‘준법’은 이들 하위 담론을 관통하는 핵심어이자 김정은 체제의 법치담론을 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상위 담론이다. 이런 측면에서 김정은 체제의 준법 담론은 법 준수를 일상화·내면화하려는 통치 담론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존의 북한 법 관련 연구들은 주로 법제도 분석이나 법 집행과 사회통제의 메커니즘, 교양·문화적 통치의 관계 등에서 북한의 법과 통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준법’을 상위 담론 및 분석 단위로 설정하고, 그 하위 구성요소의 분화·결합 양상과 통치기술적 함의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김정은 시기 『로동신문』에 나타난 준법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김정은 체제에서 법은 어떠한 방식으로 말하고, 가르치며, 통치의 기술로 재구성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은 시기의 준법 담론은 어떤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김정은 시기 준법 담론의 구조 혹은 변화는, 김정은 체제의 통치기술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은 상호 독립적이면서도 긴밀히 연결되며, 등장과 확산 양상 → 담론 구조와 내적 분화 → 통치기술적 함의를 단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논리적 토대를 이룬다.

2) 연구방법과 구성

본 연구는 김정은 시기 북한의 준법 담론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로동신문』 기사를 분석 자료로 활용한다. 『로동신문』은 북한의

〈표 1〉 분석 데이터의 시기별 구분 배경 및 특징

시기	기간	기사 수	배경
초기	2012~ 2015	43건	- 김정은 집권 초기. - 전국사법검찰일군열성자대회(2012.11) 시기 포함
중기	2016~ 2020	129건	- 노동당 제7차 당대회 시기 - 제6차 전국법무일군대회(2017.10) 전후. 초기 대비 연평균 약 2.4배 증가
최근	2021~ 2025	178건	- 노동당 제8차 당대회 시기 - 제7차 전국법무일군대회(2022.9) 전후. 지속적 확대 추세

자료: 분석 데이터를 중심으로 연구자 작성.

대표적인 당 기관지로서 정책 방향과 국가 담론을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매체라는 점에서, 북한 체제의 통치담론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특히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사회의 실제 법집행 상황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데 있기보다는, 국가가 법과 규율을 어떠한 언어와 방식으로 구성하고 전달하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따라서 『로동신문』은 북한의 공식 담론구조와 통치 언어를 분석하는 데 핵심 텍스트로 활용될 수 있다.

분석 데이터는 2012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의 기사들 가운데 ‘준법’이 포함된 기사 총 350건이다. 이 데이터들을 다시 집권 초기(초기)와 7차 당대회(중기)-8차 당대회(최근)로 구분하여 시계열적 분석 체계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분석과 담론 분석이 결합된 연구방법이 활용된다. 먼저 키워드 빈도수 분석이다. 이는 상위 키워드인 ‘준법’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 빈도와 전체 코퍼스에서 차지하는 ‘준법’의 상대적 위치, 하위 담론들과의 관계 등을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둘째, 키워드 네

트위크 분석(Keyword Network Analysis, 이하 KNA)이다. 이는 준법 담론이 구성되는 의미망을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결 중심성(Connection Centrality), 고유벡터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등 복수의 중심성 지표를 활용하여, ‘준법’이 네트워크 내에서 차지하는 구조적 위치를 다각적으로 분석한다.³⁾ 이를 통해 ‘준법’의 외적 결합(상위 키워드와의 관계)과 내적 분화(하위 단어들의 군집 구조)를 동시에 파악하고 시기별로 비교함으로써 네트워크 구조의 재배열 양상을 추적한다. 셋째, 문맥·행위주체의 분석을 통한 담론 분석이다. 이는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질적 분석 단계이다. 이 분석은 담론이 특정 행위 주체와 어떠한 언어적 관계를 형성하고, 통치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본 연구의 분석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준법 담론의 확산 양상과 네트워크 구조를 정량적·구조적으로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준법’ 담론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며, 김정은 체제의 통치기술과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를 심층적으로 해석한다. 제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시사점과 향후 방향을 제시한다.

3) 네트워크 중심성 지표의 정의와 해석에 대해서는 John Scott, *Social Network Analysis: A Handbook*, 2nd ed.(London: Sage Publications, 2000), Ch. 5 참조.

2. 선행연구 및 연구 분석틀

1) 선행연구 검토 및 평가

북한의 법 통치에 관한 연구들은 분석 대상과 문제의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전개되어 왔다. ① 사회주의 법제·법이념 연구, ② 사회통제·법 집행 중심의 연구, ③ 교양·도덕·문화 영역과 준법의 결합 등이다.

먼저 북한 법을 사회주의 국가의 제도적 구성요소로 파악하는 법제·법이념 연구이다. 김도균(2005)은 북한 법이론에서 법 개념과 법치론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내재적 접근방식으로 검토한 바 있다. 그는 북한의 법 개념에 대해 ‘명령주의적 법개념론(the command theory of law)’으로 접근하면서도, 1990년대 이후로 ‘사회주의법무생활’ 이론이 등장한 것에 주목하였다.⁴⁾ 이은영(2018)은 북한의 법이론과 법체계를 포괄적으로 고찰하면서 2012년 제정된 「법제정법」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 법체계의 구조와 특징을 정리했다.⁵⁾ 이상운(2021)도 「법제정법」이 사회주의 합법성 원리와 사회주의법무생활 이론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입법 활동 자체가 ‘법무생활 강화’와 직결된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조명하였다.⁶⁾ 이를 통해 김정은 정권에 들어 사회주의법무생활의 실천을 위한 입법 조치가 대폭 확대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법제·법이념 연구는 북한을 이른바 ‘무법 상태’로 단순화하는 시

4) 김도균, “북한 법체계에서의 법개념론과 법치론에 관한 고찰,” 『법학』 제46권 1호(2005), 446-513.

5) 이은영, 『북한의 법이론 및 법체계 고찰』(세종: 한국법제연구원, 2018).

6) 이상운, 『북한의 법제정법 연구』(세종: 한국법제연구원, 2021).

각을 교정하고, 법이 체제 운영의 한 축으로 기능해 왔음을 실증함으로써 중요한 학문적 기여를 지닌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주로 헌법이나 법률 조문과 법이론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법이 실제로 대중에게 어떤 언어와 방식으로 전달·교양되는지, 예컨대 법의 담론화 과정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설명에 머물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법의 제도적 성격보다 실제 사회통제 측면에서의 작동방식에 주목하는 연구이다. 김우영·안경모(2018)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통제를 유형화하면서, 형법·행정 처벌법의 개정이라든가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관련 법령 제정 등에 의한 법적 통제가 강화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⁷⁾ 정은미 외(2021)는 복지와 통제를 결합한 관점에서 김정은 시대의 법적 규율이 사회정책과 어떻게 연동되는지를 검토하였다.⁸⁾ 또한 박영자 외(2018)는 북한주민의 법 위반 양상과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의 선택성과 자의성 등을 조명하면서, 준법의식의 약화가 체제 관리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⁹⁾ 이러한 사회통제 중심의 연구는 북한 통치의 현실적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데 강점을 보이면서도, 법과 권력의 결합을 드러내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법을 주로 사후적 처벌·단속의 수단으로 주로 파악하기 때문에 법준수가 사전에 어떻게 학습되고 정당화되는지, 즉 처벌 이전 단계의 규율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북한의 통치가 교육·교양·선전이라는 담론적 장치를 통

7) 김우영·안경모,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통제 유형에 대한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21권 3호(2018), 43-83.

8) 정은미 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정책: 복지와 통제의 메커니즘』(서울: 통일연구원, 2021).

9) 박영자 외, 『북한의 주민 이탈과 법적 대응』(서울: 통일연구원, 2018).

해 주민의 행위를 형성하는 방식에 주목하는 연구다. 전영선(2020)은 김정은 시기 사회주의 미풍양속과 준법기풍을 조명하면서 북한의 ‘준법기풍’에 대해, 이른바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을 절대 존중하는 태도로 정의한다.¹⁰⁾ 또한 이것이 미풍양속과 결합된 문화 검열·사회통제의 핵심 장치로 작동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오기성(2019)은 구성주의 도덕교육론의 관점에서 북한 사회주의도덕 교과서를 분석하면서 수령 충실·집단주의·공중도덕과 함께 ‘사회주의 준법교양’이 도덕교육의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임을 주장한다.¹¹⁾ 이런 연구의 흐름 속에서, 그나마 준법교양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체계나 이해를 다룬 최초의 연구는 2009년에 권영태가 펴낸 글이다.¹²⁾ 그는 준법교양의 의의와 내용, 방도(형식, 방법), 담당 단위(법무해설원, 준법교양체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나, 이 내용 자체가 대부분 수십 년 전에 출간된 북한 문헌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¹³⁾ 시기적절하거나 현실적이지 않은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 연구들이 주로 북한 법 제도나 법 집행의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해 왔다면, 본 연구는 법 자체가 아니라 ‘준법’이라는 담론이 어떻게 구성되고 확산되는지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공식

10) 전영선, “사회주의 미풍양속과 ‘준법기풍’을 통해 본 북한의 문화 검열,” 『통일인문학』 제84집(2020), 43-70.

11) 이 연구는 북한 사회주의도덕 교과서를 구성주의 도덕교육론(통합적 인격교육론)의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사회주의 준법교양’이 도덕교육의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임을 확인하였다. 오기성, “구성주의 도덕교육론을 통해 본 북한의 사회주의도덕 연구,” 『도덕윤리과교육연구』 제22권 3호(2019), 87-113.

12) 권영태, 『북한의 법교육』(파주: 한국학술정보, 2009).

13) 북한의 준법교양과 관련하여 권영태가 참고한 북한 문헌은 다음과 같다. 심형일, 『주체의 법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데이터를 활용하여 준법 담론의 시계열적 변화와 의미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통치기술 관점에서 해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북한법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이를 통해 김정은 시기 준법 담론의 변화와 통치기술에의 적용, 그 함의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김정은 시기 준법 담론의 체계적 분석을 위해 ‘비판적 담론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과 ‘통치기술 분석(Governmentality Analysis)’을 결합한다. 이는 북한의 법과 규율을 단순한 제도나 어떤 규범의 문제를 넘어, 국가가 법을 어떤 언어로 재구성하고(담론), 그 언어를 통해 주민의 행위를 어떻게 유도·형성·관리하는가(통치기술)를 동시에 포착하기 위한 분석적 선택이다.

먼저 노먼 페어클라우(Norman Fairclough)에 따르면, 모든 담론은 세 가지 차원의 동시적 실천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텍스트(text) 차원으로, 어휘 선택, 문법 구조, 문장 간 결합 방식 등 언어의 형식적 속성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둘째는 담론적 실천(Discursive Practice) 차원으로, 텍스트가 어떤 맥락에서 생산·유통·소비되는지를 분석한다. 셋째는 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 차원으로, 담론이 이데올로기와 권력 관계를 재생산하거나 변형하는 방식을 분석한다.¹⁴⁾ 페어클라우는 이

14) 페어클라우는 이 3차원 모델을 1992년 저서 *Discourse and Social Change* (Cambridge: Polity Press, 1992)에서 처음 제시하고, 2002년 글에서 더욱 정교화하였다. Norman Fairclough, “Discourse, Social Theory, and Social Research: The Discourse of Welfare Reform,” *Journal of Sociolinguistics* 4, no.2(2000), pp. 163-195 참조.

중에서 특히 사회적 실천 차원에서의 담론에 더 주목한다. 이 3차원 모델은 텍스트의 미시적 분석에서 출발하여 담론적 실천을 매개로 거시적 사회구조와의 관계를 해명하는 체계적 경로를 제공한다.¹⁵⁾ 이런 측면에서 이 모델의 본 연구 적용은 매우 유용한 분석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텍스트 차원에서는 『로동신문』 기사들을 활용하여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는 담론 구조는 물론 행위주체-대상 구조를 분석한다. 또한 담론적 실천 차원에서는 시기별 반복이나 확산, 결합의 패턴들을 시계열적으로, 네트워크적으로 분석하고 추적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실천 차원에서는 이러한 담론의 반복과 구조가 김정은 체제의 통치 전략 및 권력관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해석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접근으로 사료된다. 그뿐만 아니라 페어클라우의 이론적 접근은, 담론을 단순히 현실 반영이 아니라 현실을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사회적 실천의 한 형태로 파악한다는 측면에서¹⁶⁾ 보다 유용하다. 예컨대, 북한 공식매체들에서 ‘준법기풍을 확립할 것’, ‘준법교양을 강화할 것’, ‘준법의식을 높일 것’이라는 표현의 반복 현상은, 단순히 정책의 전달을 넘어 법 준수의 의미나 방법, 주체를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구성하고, 호명하는 담론적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제시하고 미첼 딘(Mitchell

15) 블로마르트는 페어클라우의 모델을 “비판적 담론 분석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발전된 모델”로 평가하였다. Jan Blommaert, *Discourse: A Critical Introdu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21-38.

16) 페어클라우는 언어 사용은 항상 동시 텍스트이며, 담론적 실천이며, 사회적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Fairclough Norman, “Discourse, Social Theory, and Social Research,” in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he Critical Study of Language*, ed. Fairclough Norman (London: Language & Literature, 2010), Ch. 7.

R. Dean)이 뒷받침한 통치기술(governmentality)이론은 통치기술의 관점을 통해 준법 담론의 정치적 기능을 해석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푸코는 1978년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에서, 통치(government)를 ‘행위의 인도(the conduct of conduct)’로 정의하며, 국가의 권력 행사를 법적 강제나 폭력에 한정하지 않고, 교육, 규범화, 자기 통치의 유도과 같은 비강제적 수단을 포함하는 다양한 기술의 총체로 파악했다.¹⁷⁾ 여기에 토마스 램케(Thomas Lemke)가 정리한 통치기술 개념은, 권력을 합의(consensus)와 의지(will)의 문제로도, 정복(conquest)과 전쟁(war)의 문제로도 환원되지 않는 제3의 분석 경로를 제공한다.¹⁸⁾ 즉 개인의 자율적인 자기 통치 능력이 국가의 통치 전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는 데 핵심적 도구가 되는 것이다. 딘은 푸코의 통치성과 램케의 주장을 바탕으로 통치 실천의 분석틀(analytics of government)을 정교화하였다. 그 핵심은 네 가지다. ① 가시성의 장(fields of visibility)으로, 이는 통치가 무엇을 보이게 하고 무엇을 가리는가의 문제다. ② 기술적 측면(techne)으로, 통치가 어떤 구체적 수단·절차·도구를 사용하는가의 문제다. ③ 인식의 형태(episteme)로, 통치가 어떤 지식이나 사유체

17) 푸코는 governmentality 개념을 공식적으로 도입하며, 통치를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정치경제학을 주요 지식 형태로 삼으며, 안전장치를 핵심적 기술 수단으로 활용하는 매우 특수하면서도 복합적인 권력 형태”로 정의한 바 있다. Michel Foucault, *Security, Territory, Population: Lectures at the Collège de France, 1977-78*, ed. Michel Senellart, trans. Graham Burchell (London: Palgrave Macmillan, 2007), 90-101.

18) 램케는 이 논문에서 “통치기술 개념은 합의와 의지의 문제와 정복과 전쟁의 문제 양쪽을 넘어서는 이론적 이동을 대표한다고 주장한다. Thomas Lemke, “Foucault, Governmentality, and Critique,” *Rethinking Marxism* 14, no. 3 (2002): 49-64.

〈표 2〉 딘의 관점에서 본 준법 담론의 하위 구성요소

딘의 차원	준법 담론에의 적용
가시성의 장	준법교양·준법기풍·준법의식이 『로동신문』에서 어떤 영역(사법·농장·교육 등)과 결합하여 가시화되는가
기술적 측면	준법교양(교육·학습), 준법기풍(환경·분위기 조성), 준법의식(내면적 자각 유도)이라는 서로 다른 통치기술의 양식
인식의 형태	‘준법’이 사회주의법무생활, 국가관리, 사회질서 등 어떤 지식·사유 체계 속에 배치되는가

자료: 연구자 작성.

계에 의존하는가의 문제다. ④ 정체성 형성(identity formation)의 문제로, 통치가 어떤 종류의 주체를 생산하고 전제하는가이다.¹⁹⁾ 한마디로 그는 통치기술의 분석에 있어, ‘우리 자신과 타자를 통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유, 전략, 기술, 프로그램의 총체’를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다. 이 네 차원은 통치기술을 단일한 권력 행위로 환원하지 않고, 서로 연결되면서도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분석 층위로 해체함으로써 통치 방식의 복합성을 드러내는 분석적 장치로 기능한다.²⁰⁾ 딘의 네 가지 차원을 수용할 경우 북한의 준법 담론은 다음과 같은 하위 구조와 문제의식을 찾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페어클라우와 딘의 결합은 북한의 준법 담론에 대한

19) Mitchell R. Dean, *Governmentality: Power and Rule in Modern Society* (London: Thousand Oaks, 1999), 169-172; Laurence Ferry, Warwick Funnell and David Oldroyd, “A Genealogical and Archaeological Examination of the development of Corporate Governance and Disciplinary Power in English Local Government c.1970-2010,”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109 (2023): 1-16.

20) 딘은 통치기술 분석의 핵심은 통치가 사유되고 실천되는 방식을 분석하는 것이지, 통치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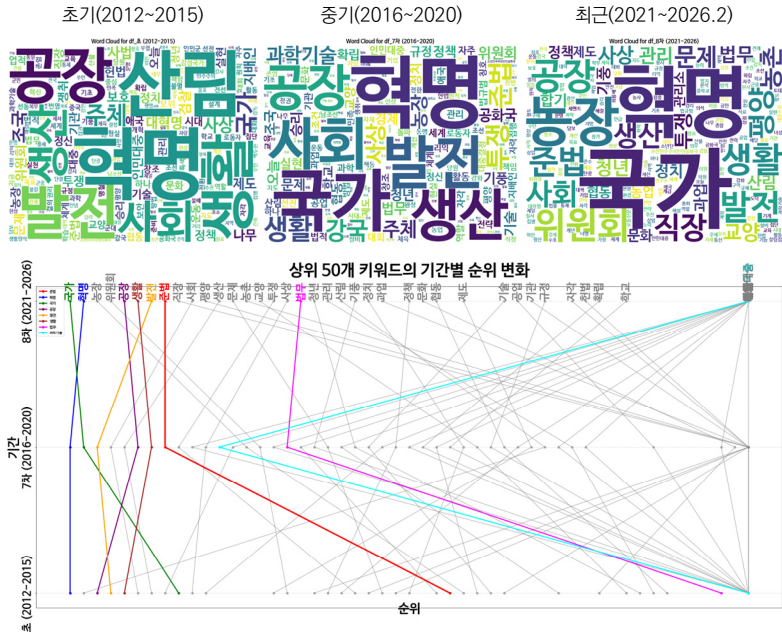
다층적 분석틀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이런 측면에서 준법 담론을 다음의 세 가지 분석 수준으로 살펴볼 수 있겠다. 첫째, 담론 수준(discourse level) 측면에서, 준법 담론이 어떤 의미와 체계 속에서 구성되거나 해체 또는 재구성되는지를 밝힌다. 둘째, 시계열 수준(temporal level)에서, 준법 담론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고 일련의 정책이나 전략 속에서 재배치되는 과정을 검토할 수 있다. 결국 이 수준은 준법 담론이 언제, 어떤 조건에서 부상하고 재배열되는지를 밝히는 단계이다. 셋째, 통치기술 수준(governmentality level) 측면에서는, 준법 담론이 어떤 방식으로 통치에 기여하는지를 해석한다. 구체적으로 상위·하위 담론들의 분화가 각기 어떤 통치기술적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분석한다. 이는 김정은 체제에 들어 준법 담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고자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김정은 시기 준법 담론이 차지하는 위치와 기능을 보다 입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3. 김정은 시기 준법 담론의 변화

1) 시계열적 변화

먼저 1장 2절에서 제시한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기별 준법 관련 기사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봤다. 준법 관련 기사는 김정은 집권 초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양적으로 꾸준히 늘어났음을 확인했다. 연평균만 보더라도, 초기에는 연평균 10.8건에 불과하였으나, 중기에는 연평균 25.8건으로 약 2.4배 증가하고, 최근에는 연평균 29.7건으로 소폭 증가

〈그림 1〉 ‘준법’ 키워드의 시기별 변화



자료: Word Cloud 분석 및 KNA 결과.

하는 추세다. 특히 2019년(35건)과 2023년(42건)에 양적 정점이 관찰되는데, 여기서 2019년은 제7차 당대회(2016)와 제6차 전국법무일군대회(2017) 이후인 동시에 2018~2019년 북미 비핵화회담 실패 국면, 경제·국방·과학 분야의 5개년계획(2016~2020)의 중반을 넘긴 시점이다. 또한 2022년은 제8차 당대회(2021)와 제7차 전국법무일군대회(2022) 직후인 동시에 핵독트린 및 핵무력 법제화(2022~2023) 국면에 해당한다. 이러한 특징적인 배경에서 준법 관련 기사들이 어떤 특징을 드러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워드 클라우드 분석과 빈도수 분석을 수행하였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초기 빈도수 우선순위는 혁명, 산림,

〈표 3〉 김정은 시대 주요 준법 담론들의 비중 변화

하위 담론	출현 기사 수 및 비율			
	전체(중복)	초기	중기	최근
준법기풍	174건(49.7%)	17건 (39.5%)	67건 (51.9%)	90건 (50.6%)
법무생활	128건(36.6%)	14건 (32.6%)	45건 (34.9%)	69건 (38.8%)
준법의식	98건(28.0%)	5건 (11.6%)	30건 (23.3%)	63건 (35.4%)
준법교양	73건(20.9%)	6건 (14.0%)	21건 (16.3%)	46건 (25.8%)

자료: 『로동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연구자 통계.

공장, 발전, 생활, 사회, 생산, 주체, 국가의 순으로, 중기에는 혁명, 국가, 발전, 사회, 생산, 공장, 생활, 준법의 순으로 바뀌면서 국가와 준법이 상위 키워드로 등장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가, 혁명, 농장, 위원회, 공장, 생활, 발전, 준법의 순으로 ‘국가’ 키워드가 1위 빈도수를 나타낸다. 이는 2017년 11월 이후로 ‘국가제일주의’ 담론이 등장 및 확산하는 데 따른 전략적 변화가²¹⁾ 준법 관련 담론들에도 반영되었음을 보여주는 핵심 근거다. 무엇보다도 ‘준법’은 초기 23위에서 중기 이후로 최근까지 8위를 기록하였다. 2016년 7차 당대회와 국가경제발전5개년 전략 이후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준법 담론을 구성하는 주요 하위 담론들, 예컨대 준법기풍이나 준법교양, 준법의식, 법무생활 등은 분석 대상 기사들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담론들이다. 따라서 분석 대상에서 이들 표현의 출현 빈도와 비율을 시기별로 살펴봤다.

21) 강재연, “김정은 집권 10년 통치담론의 동학: 계승성과 독자성, 도전요인,” 『국제정치연구』 제25권 3호(2022),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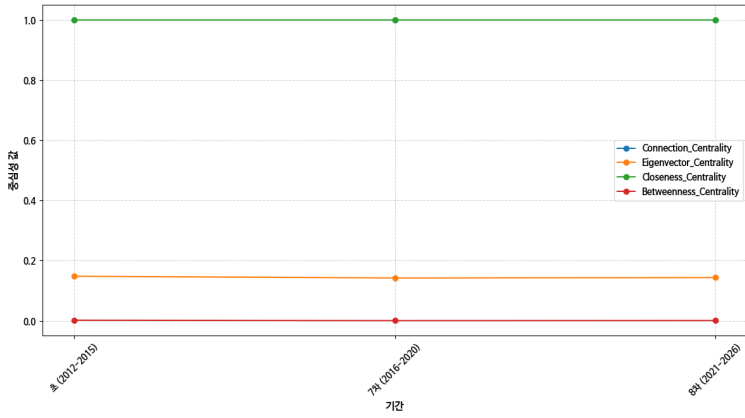
‘준법기풍’은 세 시기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법무생활’은 약 3분의 1 안팎의 비율을 유지한다. 또한 ‘준법교양’과 ‘준법의식’은 시기가 지날수록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은 시기별 비율 변화는 각 하위 표현의 상대적 중요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정량적 지표이다.

2) 네트워크로 본 준법 담론의 구조

준법 담론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각 시기별 상위 50개 키워드를 대상으로 키워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연결 중심성(Connection Centrality), 고유벡터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과 같은 지표를 산출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어떤 키워드가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하는지, 그리고 ‘준법’이 어떤 키워드 군집과 함께 하나의 의미를 이루는지를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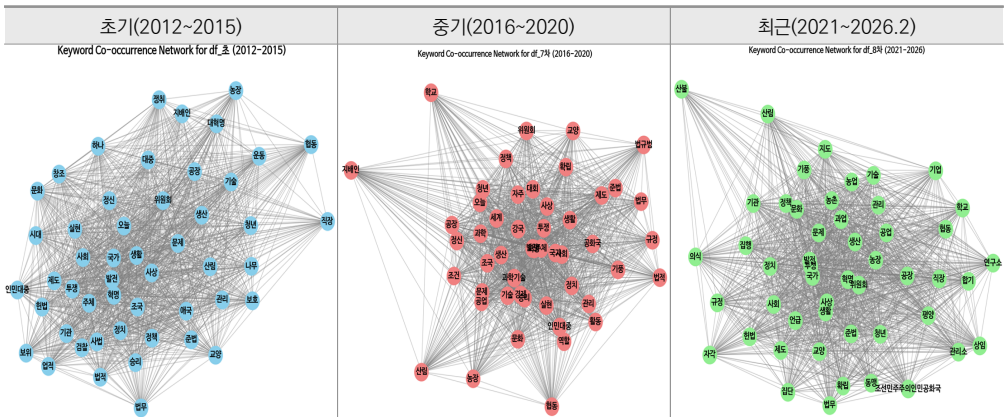
분석 결과, ‘준법’은 세 시기 모두에서 연결 중심성·고유벡터 중심성·근접 중심성이 1.0 또는 1.0에 매우 가까운 값을 기록하였다. 이는 ‘준법’이 상위 50개 키워드 대부분과 직접 연결될 뿐 아니라, 연결된 키워드들 역시 네트워크에서 중요도가 높은 핵심 노드임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준법’은 단지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아니라 담론 네트워크 전체의 구조와 정보 흐름을 조직하는 중심 노드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매개 중심성은 다른 중심성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0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준법’이 모든 키워드 간 흐름을 독점적으로 통제하는 게이트키퍼라기보다 서로 다른 주제 클러스터(예컨대, 법·제도, 국가·발전, 농장·농촌 등)를 폭넓게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는

〈그림 2〉 ‘준법’ 키워드의 시기별 중심성 변화



자료: KNA 결과.

〈그림 3〉 시기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자료: KNA 결과.

점을 시사한다.

앞선 워드클라우드 및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준법’이 결합하는 키워드 군집은 시기별로 뚜렷하게 재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김정은 집권 초기에 ‘준법’은 검찰, 사법, 제도, 헌법, 보호, 산림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법·제도·규제·환경 관리 클러스터와 함께 하나의 의미망을 형성한다. 이는 이 시기 준법 담론이 주로 법 집행과 규제, 자원 보호의 언어와 결합해 있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7차 당대회 운영 기간에는 국가, 혁명, 발전, 법무 등의 중심성이 상승하면서, ‘준법’은 이들과 함께 국가·발전·법무 클러스터의 중심에 위치한다. 초기 시기에 중요도가 높았던 산림, 검찰, 사법 등의 중심성은 상대적으로 하락하면서, 준법 담론의 외적 결합 중심이 법 집행이나 환경 관리 측면에서 국가운영이나 강국, 법무 체계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셋째, 최근 네트워크에서는 농장, 농촌, 협동, 위원회, 조직, 직장 등이 상위 키워드로 부상하고 ‘준법’과의 네트워크 관계가 크게 강화된다. 특히 ‘농장’은 키워드 순서상 30위에서 3위로, ‘농촌’은 51위에서 14위로 급상승해, ‘준법’이 농업·농촌·조직 단위 담론의 핵심 축으로 재배치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8차 당대회 이후로 추진되는 농촌 진흥정책과²²⁾ 더불어 준법 담론이 농촌혁명을 위한 현장 단위의 운영과 밀착되는 방향으로 외적 결합 구조가 확장된 결과를 보여준다.

이처럼 초기-중기-최근으로 갈수록 ‘준법’이 결합하는 클러스터는 법·제도 → 국가·강국·법무 → 농장·농촌·조직으로 이동하는데, 이는 준법 담론이 국가의 전략적 담론 영역과 밀접하게 결합하여, 특히 어

22) 송현진, “김정은 시대 ‘새 시대 농촌강령’의 등장 배경 및 내용,” 『통일과평화』 제14권 2호(2022), 117-162.

떠한 원칙이 중요하게 부각되는지에 따라 재배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준법 담론은 그 하위담론인 준법기풍, 준법교양, 준법의식, 법무생활과 내적 분화를 일으키며 또 다른 외적 결합구조를 재생산하게 된다. 실제로, ‘준법기풍’은 세 시기 모두에서 준법과 가장 인접한 위치에 있으며, 혁명, 국가, 사회주의, 농장, 조직 등과 폭넓게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이는 이념이나 국가, 조직, 농장 클러스터를 가로지르며, ‘준법’을 집단적 분위기와 태도의 언어로 연결하는 핵심 매개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법무생활’은 중기와 최근 시기에 법무, 제도, 위원회, 국가 등과 함께 군집을 형성하면서 준법을 제도화된 법생활과 행정·조직 운영의 언어로 위치시킨다. 이를 통해 준법 담론은 국가·조직의 운영 방식과 밀접하게 결합 또는 강화되었음을 나타낸다. ‘준법교양’은 교육, 학교, 청소년, 도덕, 사상, 교양 등의 키워드와 네트워크상에서 인접하면서, ‘준법’을 교육, 도덕, 사상 형성의 영역과 연결한다. 이는 준법 담론이 단지 행위 규범이 아니라 교양을 통해 습득해야 할 지식이나 도덕의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준법의식’은 자각, 책임, 공민, 양심, 의무와 함께 클러스터를 구성하면서, ‘준법’을 개인의 내면적 자각과 자기 통치의 언어에 연결한다. 특히 최근 시기에 ‘준법의식’ 관련 키워드들의 중심성이 높아지는 것은 ‘준법’이 점점 더 자기 규율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이 네 가지 하위 담론들은 각각 교육-기풍-의식-생활이라는 서로 다른 축을 따라 ‘준법’ 담론의 내적 분화를 구조화한다. 동시에 이 네 축은 이념·국가·조직·농장(경제) 등 외적 결합 구조와 연결되어, ‘준법’ 담론을 다층적 통치기술의 네트워크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김정은 시대 준법 담론이 하나의 고정된 의미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수준(국가-조직-개인)을 관통

하는 다층적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시기별 재배열과 의미 변화

여기서는 앞선 정성·정량 분석을 토대로, 김정은 시기 준법 담론의 의미가 시기별로 어떻게 재배열되었는지를 통치기술 관점에서 해석한다.

초기(2012~2015) 준법 담론의 특징은 법과 규제를 중심으로 한 사후적 통제 언어들이 상위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즉, 빅데이터 분석에서처럼 ‘준법’은 검찰, 사법, 제도, 헌법, 보호, 산림 등과 함께 법집행·제도·자원관리 클러스터를 형성하며, 법 위반에 대한 처벌과 규제, 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문맥 속에서 주로 사용된다. 반면, 하위 표현에서는 준법기풍과 법무생활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준법교양과 준법의식의 비중은 낮은 편이다. 이는 이 시기 ‘준법’이 교육이나 내면적 의식보다는 집단적 분위기와 제도적 생활양식의 문제로 이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준법’은 법 위반의 경우 혹은 그 이후의 제재와 규율을 통해 통치하는 방식, 즉 사후적이고 외재적인 통제 기술로서의 성격이 강한 측면이 엿보인다.

중기 시기(2016~2020)에 들어서면서 준법 담론의 중심은 법집행이나 규제만의 문제에서 국가운영과 국가강국의 규범 원칙으로 이동한다. 실제로, 빅데이터 분석에서 국가, 강국, 발전, 기술, 법무 등이 ‘준법’과 함께 핵심 클러스터를 이루며, ‘준법’이 국가 발전전략과 제도적 법무체계의 필수 조건으로 제시되는 양상이 뚜렷해진다. 이와 함께 하위 표현 중에서는 준법교양과 준법의식의 비중이 초기보다 뚜렷하게 높아지고, 법무생활도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법 준수가 교육과 내

면화의 과정을 통해 국가 목표와 연결되는 규범으로 재구성된다. 이는 ‘준법’이 단지 처벌 회피를 위한 규범이 아니라 국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통치 이성(governmental rationality)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국가의 효율적 운영과 강국의 조건으로 주민의 행위를 규제하되, 법을 매개로 세밀하게 조직·관리해야 한다는 논리가 강화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최근 시기(2021~2026)에는 준법 담론이 국가 차원을 넘어 농장·농촌·조직·직장 등의 일상적 공간(단위)과 개인의 내면으로 깊숙이 침투한다. 실제로 빅데이터 분석에서 농장, 농촌, 협동, 위원회, 조직, 직장 등의 키워드는 ‘준법’과 밀접하게 결합하여, ‘준법’이 생산 현장과 생활 공간에서 지켜야 할 규범으로 강조되는 양상이 강하게 드러난다. 이는 준법이 국가의 정책을 정당화하는 상위 원칙을 넘어 농업·농촌 개발과 관련된 조직 운영의 구체적 실천 규범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하위 표현에서도 준법의식과 ‘준법교양’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거나, 법 준수를 자각과 학습의 문제로 다루는 담론이 전면에 부상하는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준법의식’이 자각, 책임, 공민, 양심 등과 함께 군집을 이루고, ‘준법교양’이 교육, 도덕, 사상, 교양과 결합하는 구조는, ‘준법’이 개인의 자기 규율(self-discipline)을 생산하는 통치의 기술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최근 시기에는 ‘준법’이 법을 어기지 않도록 ‘감시·처벌하는 규범’을 넘어 주민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도록 만드는 내면화된 규범으로 그 의미가 확장된 것이다.

이러한 재배열은 김정은 체제가 법과 규율을 단순한 억압·강제의 장치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조직-개인의 각 수준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결합시키며, 점차 사후적 통제에서 사전적·내재적 통치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방향

전환이 실제 기사나 문장 속에서 어떤 서술방식과 행위 주체-대상 구조로 구현되는지를 알아본다.

4. 준법 담론의 작동방식과 통치기술

1) 문장 유형과 서술방식의 특징

문장 유형과 서술방식을 통해 ‘준법’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은, 단순한 규범 선언을 넘어 주민의 행위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담론 수준에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우선 준법 관련 기사들에서는 명령형·당위형 문장이 두드러진다. 특히 올해 준법 담론 기사들에서는 명령형·당위형 문장의 비중이 40~70% 범위로 나타난다.

분석 결과에서 보면, 기사 유형과 주제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준법 담론이 경제정책담론이나 다른 국가정책 담론에

〈표 4〉 최근 준법담론 기사들에서 나타난 문장 유형 비교

기사 제목	게재일	명령형/당위형	청유형/제안형	서술형
중요한 공민적 의무	1.16	약 70%	약 10%	약 20%
농촌의 모든 가정을...	1.23	약 40%	약 20%	약 40%
집단의 사랑과 기대...	1.31	약 40%	약 30%	약 30%
모범준법군청호 수여	2.4	약 50%	약 20%	약 30%

자료: “중요한 공민적 의무,” 『로동신문』, 2026년 1월 16일; “농촌의 모든 가정을 사회주의생활문화 모범가정으로 꾸리자,” 『로동신문』, 2026년 1월 23일; “집단의 사랑과 기대를 귀중히 여길 때,” 『로동신문』, 2026년 1월 23일; “함경남도 북청군에 모범준법군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로동신문』, 2026년 2월 4일.

비해 더욱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언어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먼저 정부의 정령이나 결의문, 사설, 논평 등에서 “혁명적 준법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야 한다”, “누구나 법 앞에 한점의 양심의 가책도 없어야 한다”와 같은 표현들은 가장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들이다.²³⁾ 이러한 문장들은 행위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면서 법 준수를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의무적 당위로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명령형·당위형의 높은 비중은 경제정책담론보다 준법 담론이 더욱 강제적이고 비협상적인 성격을 지님을 보여준다. 이는 북한 체제에서 법 준수를 국가의 절대적 요구로 위치시키려는 통치 전략을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당위형 서술은 준법기풍, 법무생활, 준법의식과 결합하여 법 준수를 ‘마땅히 지켜야 할 혁명적 요구’로 규정한다. 예를 들어, 모범준법단위 수여 정령에서는 “혁명적준법기풍을 확립하고 국가사회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데서 모범적인 단위들”이라는 식으로 서술하여 준법이 체제 수호의 필수 조건임을 강조한다. 두 번째 특징은 김정은의 발언과 지도가 준법 담론의 근거이자 정당화 장치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공화국법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인민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는 위력한 무기이다”와 같이, 김정은의 발언으로 배경화되는 기사의 서술 구조는,²⁴⁾ 법과

-
- 23) “혁명적 준법기풍과 자각성,” 『로동신문』, 2025년 12월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2056호(2025년 12월 25일),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데서 모범적인 단위들에 모범준법단위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로동신문』, 2026년 1월 15일; “공민적 자각,” 『로동신문』, 2023년 6월 21일;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기초: 자각성,” 『로동신문』, 2023년 5월 22일.
- 24) “[사설] 사회주의헌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 『로동신문』, 2021년 12월 27일; “공화국헌법은 우리 국가의 존엄과

준법을 단순한 국가 규범이 아니라 혁명의 성과이자 체제 발전을 위한 인민의 무기로 재규정한다. 또한, “우리 당의 선군혁명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확립하고…”과 같은 문장들은,²⁵⁾ 법무생활과 준법기풍 강화가 김정은의 지도와 직결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이처럼 최고지도자의 발언이나 지도를 인용하는 서술방식은, 준법 담론에 카리스마적 권위를 부여하는 동시에 주민에게 법 준수를 지도자에 대한 충실성과 연결된 행위로 인식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다음으로, 준법 담론은 명령형·당위형과 더불어, 모범 단위·인물에 대한 서사형 서술을 통해 그 설득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예컨대 “모범준법단위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와 같은 정령이나 보도 기사에서는 구체적인 단위명과 공로들이 열거되면서 그들이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고 혁명적준법기풍을 확립하는데서 남다른 성과를 이룩하였다’는 식으로 서술된다. 또한 현장 기사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하거나 제시하며,²⁶⁾ 준법을 현실문제나 어떠한 위기 극복과 직결된 실천으로 제시한다. 특히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법규범과 규정을 제개정하기 시작했던 2021년을 전후로, 북한의 준법 담론은 규격·품질·금융·환경·에너지·IT·기업·교육 등 경제사회의 하부구조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 및 기술 담론들 속으로 깊숙이 침투하는 경향을 드러

인민의 복리를 담보하는 강력한 무기이다,” 『로동신문』, 2025년 12월 27일.

2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로동신문』, 2017년 9월 1일.

2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83호(2026년 1월 25일), 함경남도 북청군에 모범준법군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로동신문』, 2026년 2월 4일; “[사회주의근로자로 떳떳이 살자!] 집단의 사랑과 기대를 귀중히 여길 때,” 『로동신문』, 2026년 1월 31일.

낸다.²⁷⁾ 이러한 서사형 서술의 진화는 기존의 추상적인 법규 준수를 구체적인 인물·단위·구조·체계 내의 이야기로 치환함으로써 독자가 준법을 현실적이고 모방 가능한 행위로 인식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문장 유형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전당, 전군, 전민’, ‘전체 인민’,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 ‘농장과 공장의 전 일군들과 종업원들’과 같이 포괄적 집단 호명이 빈번하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법 준수의 주체를 특정 집단이 아니라 전 사회 구성원 전체로 설정한다. 이러한 포괄적 호명은 두 가지 효과를 가진다. 먼저 법 준수를 보편적 의무로 만들어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규범적 압력을 형성한다. 또한 ‘우리’, ‘우리인민’과 같은 1인칭 복수 표현을 통해 준법을 집단적 정체성과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동원과 동일시를 유도한다.

결과적으로 문장의 독특한 형식이 드러내는 준법 담론의 통치방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겠다. 명령형·당위형 문장을 통해 준법을 의무적·비가역적 요구로 제시하고, 김정은의 발언·지도를 인용하여 준법을 혁명과 인민의 이름으로 정당화한다. 다음은 모범 단위·인물·대상에 대한 서사형 서술로 준법을 구체적 실천과 결부된 모범 행위로 제시하고, 포괄적 집단 호명을 통해 준법을 전사회적 의무이자 집단 정체성의 일부로 구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준법을 단순

27) “현실적요구에 맞게 법규범과 규정을 수정보충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추동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 『로동신문』, 2020년 1월 30일; “[규격화사업을 개선하는데 큰 힘입어 국가의 법으로 여기고있는가,” 『로동신문』, 2025년 12월 22일; “[한W의 전기라도 아껴쓰는 기풍을 확립하자] 준법의식과 전기절약,” 『로동신문』, 2025년 11월 18일; “교차생산규률준수에서 나서는 요구,” 『로동신문』, 2025년 10월 9일; “준법의식과 제품의 질,” 『로동신문』, 2024년 11월 12일; “농촌의 모든 가정을 사회주의생활문화모범가정으로 꾸리자,” 『로동신문』, 2026년 1월 16일.

한 규정 준수가 아니라 지도자에 대한 충실성과 집단적 정체성, 현실 위기 극복을 포괄하는 통치 언어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장 구조 속에서, 그리고 처벌 이전 단계로써의 준법 담론은 어떠한 구조를 형성하는 것일까?

2) 준법담론을 통해 본 김정은 통치전략

본 절에서는 『로동신문』 ‘준법’ 관련 기사 350건에서 ‘준법교양’(73건), ‘준법기풍’(174건), ‘준법의식’(98건)의 사용 양상과, ‘처벌’·‘형벌’·‘형사책임’·‘행정책임’과 같은 직접적인 제재 관련 표현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준법’이 어떻게 처벌 이전 단계에서 작동하는 삼중 규율 구조를 형성하는지를 분석한다.

우선, 『로동신문』 기사들에서 준법 담론을 둘러싼 주요 특징은, 직접적인 처벌 언급의 희소성과 사전 규율의 강조다. 전체 350건의 기사에서 ‘처벌’이라는 단어는 2건, ‘행정책임’은 단 2건에서만 등장하며, 나아가 형사책임과 관련된 키워드는 단 한 차례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로동신문』의 준법 담론이 법 위반 이후의 형벌·책임 추궁보다는 위반이 발생하기 이전 단계에서의 규율과 예방에 훨씬 더 초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신 기사들은 “법적 요구를 엄격히 지킴으로써”, “사업과 생활의 모든 계기와 공정이 법규정과 규범의 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높은 준법의식을 지니도록”, “혁명적준법기풍이 확고히 지배되도록”과 같은 표현을 반복하면서 법 이전에 일상적 행위와 의식을 미리 조정하는 통치 방식을 강조한다.

또한 ‘준법교양’을 통해 알게 만드는 통치, 즉 인지적 규율이다. 이 경우에는 주로 법무해설원이나 당조직, 기관 일군들이 주체가 되어 중

업원·주민에게 법규범과 법무생활의 요구를 설명·학습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준법교양을 단위실정과 결부하여 설득력있게 진행함으로써 모든 종업원들이 생산활동에서 법적요구를 엄격히 지키도록...”이라든가,²⁸⁾ “...법무해설원들은 자각과 의지를 가지고 법 지식을 쉽게 해설하고 대중이 스스로 법을 지키도록 이끌어야 한다” 등의 맥락상 표현 등을 들 수 있다.²⁹⁾ 이런 구조는 주민이 법을 몰라서 어기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의 내용과 취지를 반복적으로 알게 만드는 인지적 규율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준법교양’은 ‘법이 무엇인지, 왜 지켜야 하는지’를 반복적으로 주입함으로써 법 준수가 이성적·지식적 선택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통치기술로 기능한다. 즉 준법교양은 법을 통해 개인의 행동을 사전에 조정하고 규범적 기준을 내면화하도록 유도하는 통치기술의 한 형태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준법기풍’을 통한 분위기 조성으로써의 통치, 즉 환경적 규율이다. 이러한 방식은 정령이나 ‘칭호 수여’ 기사, 현장사례 기사 등 모두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진다. 이때 강조되는 것은 개인이 혼자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집단과 환경 전체에 준법이 스며든 분위기를 조성한다. 예컨대 “법무해설과 다매체편집물을 리용한 학습 등을 참신하게 진행하여 집단안에 혁명적준법기풍이 확고히 지배되도록 하고있다”라든가,³⁰⁾ “사회주의사회라고 하여 결코 준법기풍이 저절로 확립되는것은 아니다.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제되

28) “올바른 안내자,” 『로동신문』, 2025년 12월 27일.

29) “준법기풍이 몸에 꼭 배야 한다,” 『로동신문』, 2025년 12월 9일.

30) “준법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대중운동열기 더욱 고조 올해에 들어와 전국적으로 2400여개의 단위가 모범준법단위칭호를 수여받았다,” 『로동신문』, 2025년 12월 27일.

는것만큼 …” 등과 같은 것이다.³¹⁾ 또한 모범준법단위칭호 수여 기사에서는 특정 단위가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 온 사회에 혁명적 준법기풍을 확립”한 공로로 칭호를 받는다는 서술이 반복된다. 이는 모범 단위를 통해 준법기풍이 다른 단위·지역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의도하는 것이다. 이처럼 ‘준법기풍’은 환경과 집단 분위기를 통해 행동을 규율하는 환경적 규율로 해석할 수 있다. 개인이 법을 어기면 눈에 띄는 것이고, 법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분위기를 만드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준법의식’을 통해 스스로 지키게 하는 통치, 즉 자기 규율방식이다. ‘준법의식’ 관련 기사는 98건에서 등장하며, 특히 최근 시기에 그 비율이 크게 상승한다. 여기서 법 준수는 더 이상 외부의 강제가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양심과 의식을 점검하는 문제로 제기된다. 예컨대, “… 국민들이 법앞에 성실한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은 무엇보다 그들의 준법의식에 달려있다. 우리의 법이 사회성원이 라면 누구나 빠짐없이 준수해야 하는 행동준칙이고 …”,³²⁾ “… 모범준법단위칭호수여식은 전체 인민을 혁명적준법의식의 체현자, 법의 진정한 주인으로 키우고 …” 등이다.³³⁾ 또한 “높은 준법의식을 지니도록 하는것을 비롯하여 농업근로자들속에서 건전하고 혁명적인 생활기풍을 확립해나가기 위한 사업”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준법의식은 생활 전반과 연결된 자기 규율의 기준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문장 구조는, 통치가 ‘감시와 처벌’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법준

31) ‘중요한 공민적 의무,’ 『로동신문』, 2026년 1월 16일.

32) “중요한 공민적 의무”.

33) “주체의 정치현장을 강력한 무기로 틀어쥐고 전면적국가부흥의 새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자,” 『로동신문』, 2025년 12월 27일.

수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드는 내면화된 통치기술적 변화를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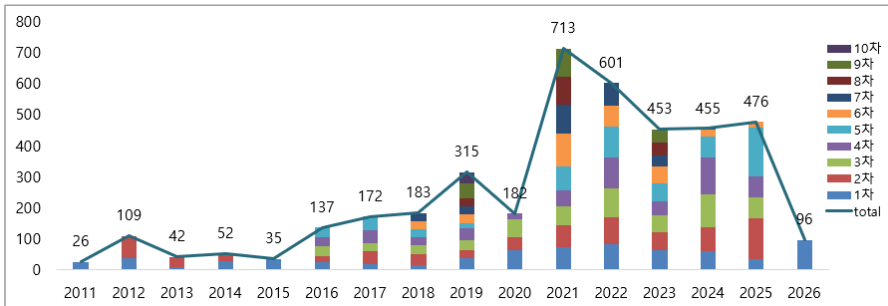
결국 김정은 시기의 준법 담론은 처벌 이전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삼중 규율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지적 규율로서의 ‘준법교양’, 환경적 규율로서의 ‘준법기풍’, 자기 규율로써의 ‘준법의식’이다. 다시 말해 ‘준법교양’은 법무해설원·당조직·기관 일군들이 법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학습시키면서, 주민이 법을 알게 만드는 규율이다. 법의 조항과 취지를 이해시키는 것을 통해 법 준수가 합리적 선택으로 인식되도록 유도한다. ‘준법기풍’은 모범단위, 칭호 수여, 집단 학습과 선전 등을 통해 집단과 사회 전반에 법 준수가 지배하는 분위기를 조성·규율하면서 개인이 법을 어기는 것이 집단 내에서 이질적으로 느껴지도록 만드는 환경적 통치기술이다. ‘준법의식’은 공민 각자가 스스로의 준법의식을 점검하고 법 앞에 양심의 가책이 없도록 생활해야 한다는 요구를 통해, 자기 자신이 자기 통치의 주체이자 대상이 되는 규율이다. 이 세 층위는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한다. 먼저 준법교양을 통해 법의 내용을 알게 하고, 준법기풍을 통해 집단적 분위기를 형성하며, 준법의식을 통해 그 규범을 개인 내부에 내면화하는 단계적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형벌·처벌은 거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으며, 오히려 처벌 이전의 예방·내면화·환경 조성이 통치의 중심으로 부각된다. 이러한 삼중 규율 구조는 통치기술 관점에서 볼 때 김정은 체제가 법을 단순한 억압·강제 수단이 아니라, 교육-환경-자기 통치를 동시에 조직하는 정교한 통치 장치로 재구성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사회주의법치국가’의 대표 담론화

북한에서 ‘모범준법단위칭호’ 수여는 김정은 체제의 등장을 전후로 등장했다. 그만큼 김정은 체제는 전 사회적인 준법 확립 기조를 통치전략의 핵심 요소로 간주했다는 의미가 되겠다. 이러한 기조는 2017년 12월 ‘우리국가제일주의’ 등장과 함께³⁴⁾ 증가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8차 당대회 이후로 ‘사회주의법치국가’ 제시와 더불어 독자적인 ‘김정은 체제 1.0’의 출발 속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실제로, 『로동신문』을 통해 확인된 ‘모범준법단위칭호’ 수여 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에서 보면, 김정은 체제의 집권 초기까지만 해도 소규모단위(예컨대, 분조, 작업반, 연구실, 학과, 인민반 등)의 수여가 대표적이었으나, 폭발적인 증가 이후로는 지역·조직단위(예컨대 시, 군, 연구소, 학부, 공장, 직장, 연합기업소 등) 차원의 광폭적인 모범준법단위칭호 운동이 확

〈그림 4〉 김정은 체제 ‘모범준법단위칭호’ 수여 통계 및 특징



자료: 『로동신문』(2011.1.1.~2026.2.28.) 기사를 바탕으로 연구자 통계.

34) 구갑우, “북한의 ‘우리국가제일주의’담론의 계보학,” 『현대북한연구』 제27권 1호(2024), 13.

대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집권 초기까지만 해도 연중 한두 차례에만 불과했던 수여식이 최고 10여 차례에 걸쳐 대규모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모범준법단위칭호 대상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결정되고 수여된다.

상임위원회 수여에서는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 및 이행을 핵심 결정 이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법을 통한 통치의 제도화가 준법의식·준법기풍·준법교양을 구체적인 통치 언어로 구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라는 통치전략은, ‘준법’ 담론을 통해 법 준수의 의무를 교육·환경·자기 규율의 차원에서 일상화·제도화하는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다. 『로동신문』 기사에서는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가 ‘국가의 부흥발전을 앞당겨오는 애국’이라고 강조하며, 준법이 곧 국가 발전과 애국의 실천으로 제시된다.³⁵⁾ 이러한 서술은 최근 2025년 이후로 등장하는 법과 규율에 의거한 국가관리의 강화, ‘강국 건설과 제도적 정비’라는 담론 속에서 결을 같이 한다.³⁶⁾ 다시 말해, 준법 담론은 국가강국이나 과학기술 노선 속에서 법과 규율을 통한 국가운영의 핵심 수단으로 삼는 전략이며, 『로동신문』을 통해 이를 대중에게 전달·내면화하는 통치 언어로 기능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시기(2021~2026) 분석에서 농장, 농촌, 협동, 조직, 직장 등의 키워드들이 ‘준법’과 함께 상위 키워드로 급상승하는 것은, ‘준법’이 농업·농촌·현장 단위의 통치 전략과 밀접히 연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기사들에서는 ‘농촌의 모든 가정을 사회주의생활문화모범

35) “공화국헌법은 우리 국가의 존엄과 인민의 복리를 담보하는 강력한 무기이다,” 『로동신문』, 2025년 12월 27일.

36) “법과 규율에 의거한 국가관리의 강화,” 『로동신문』, 2025년 11월 27일; “강국 건설과 제도적 정비,” 『로동신문』, 2025년 11월 18일.

가정으로 꾸려야 한다'는 측면에서의 높은 준법의식과 함께 모범준법 단위로 농장·공장이 자주 언급된다. 이는 북한이 강조해 온 새 시대 농촌 건설과 지방산업, 현장 중시 노선과 연결되며, '준법'이 농장·공장·협동조합 등 구체적인 생산 단위에서의 생산성과 생활문화를 동시에 관리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최근 김정은 체제의 통치전략은 법과 규율을 국가-조직-개인의 각 수준에서 다르게 적용·내면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로동신문』의 준법 담론은 이를 교양-기풍-의식이라는 삼중 규율 구조로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핵심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종합해 보면, 최근 준법 담론의 우선순위 재배열, 그에 따른 핵심 변화는 지난 8차 당대회 이후로 5개년계획(2021~2025)의 주요 목표로 추진됐던 동시적·균형적 발전론과 농업문제·농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새 시대 농촌혁명', 도농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발전 20×10 정책, 경제사업 전반에 대한 새로운 사업체계와 질서 확립을 위한 국가적·계획적·과학적 자력갱생이라는, 대표적인 4가지 핵심 축 사이에 있었다. 이 가운데 준법교양은 단순한 법 준수 교육이나 행정적 계도 활동이 아니라, 언어·조직·규범이 결합된 복합적 통치기술로 작동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준법교양 담론은 그 서술방식에 있어 직접적 강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준법을 정상적이고 당연한 행위 기준으로 구성함으로써 규범 준수의 언어적 조건을 사전에 형성한다. 이는 준법이 법 조항의 문제라기보다 일상적 판단과 행위의 기준으로 재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준법 담론은 당-국가기관-사회조직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주체 구조 속에서 주민 일반·간부·특정 집단으로 분화된 대상을 상정하고, 자발적 학습이 아니라 조직화되고 분업화된 통치를 실천하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간부가 교양의 대상이

자 모범 주체로 동시에 위치하면서도, 준법이 위계적 명령만이 아니라 시범과 비교를 통한 규율로 작동하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김정은 체제에서의 최근 준법 담론 변화는 규율 중심의 통치 제도화와 법·사상 결합의 통치 심화를 동시에 보여주는 핵심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주의법치국가론 속에서 법은 사범 영역에 한정된 규칙 체계가 아니라 사상·도덕·생활 규범과 결합하여 주민의 일상 속에 침투하는 통치 장치로 재구성된 것이다. 그 결과 준법은 정치적 충성이나 이념 학습과 분리되지 않은 채, 체제운영의 기본적인 행위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유인하는 것이다. 물론 본 연구의 분석은 『로동신문』 담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만큼, 이러한 담론이 실제 정책 집행이나 사회적 행위에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에는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동신문』이 북한의 공식 정책 방향과 통치 언어를 제시하는 핵심 매체라는 점에서, 준법 담론의 구조와 변화는 김정은 시기 통치 방식의 중요한 단면을 보여주는 자료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최근 9차 당대회를 계기로 북한은 지속적인 경제사회 전 부문 법들의 제·개정 확대와 그에 따른 정확하고 실질적인 법적기준 및 무기들을 마련함과 동시에 전 국가적, 전 사회적인 법무해설 강화 및 혁명적 준법기풍 확립을 위한 ‘선풍’을 또다시 제시하고 있다.³⁷⁾ 이에 따라 새로운 5개년계획 기간에 준법 관련 담론들은 더욱 두드러지게 강조되거나 새로운 준법 담론들이 재생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내각 지휘하에 2024년 이후로 본격 추진되고 있는 국가·부문별·단위

37) “불굴의 개척투쟁으로 전취한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새로운 려정의 줄기찬 전성과 도약으로 이어나가자,” 『로동신문』, 2026년 2월 26일.

별 통합관리시스템(디지털 전산화) 구축에서도,³⁸⁾ 경제건설과 사상사업의 전반에서 준법의식과 준법교양에 대한 요구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김정은 시기 북한의 준법 담론을 통해, 북한에서 법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치적 통치 언어로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로동신문』에서 ‘준법’ 관련 기사들을 활용하여 키워드 빈도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담론 분석과 통치 기술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은 시기 북한의 준법 담론은 단순한 법 준수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행위 기준을 규정하는 핵심 담론으로 자리하고 있다. 특히 ‘준법’은 ‘준법기풍’, ‘준법교양’, ‘준법의식’, ‘법무생활’ 등 다양한 하위 담론과 결합하여 하나의 담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시기별로 그 중심성과 결합 방식이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둘째, 집권 초기에 준법 담론은 주로 법 집행 영역에서 움직였으나, 7차 당대회 이후로는 국가발전담론과 결합하면서 국정 운영의 규범 원칙으로 확대되고, 8차 당대회 이후로는 분야별 일상적 생산 공간과 결합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변화는 준법 담론이 특정 정책의 영역에 한정된 규범이 아니라 국가-조직-개인의 다양한 수준에서 재배치되는 담론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

38) 관련 자료는 다음을 참조할 것, 강채연, “북한의 디지털 전환정책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8권 4호(2024), 3-29; “전면적 발전의 새시대가 제기하는 5가지 중요 요구를 깊이 새기자,” 『로동신문』, 2026년 3월 4일.

여준다. 셋째, 담론의 서술방식에서도, 법 준수를 단순한 규정 준수가 아니라 혁명적 의무이자 공민적 책임으로 승화시키고, 준법을 사회적 규범과 집단적 정체성의 대상으로 재구성하였다.

결국 본 연구의 핵심 명제는 다음과 같다. “김정은 체제에서 준법 담론은 법·사상·규율을 결합한 통치 언어로 작동하며, 주민의 행위를 교육·환경·자기 규율의 단계적 구조 속에서 조직하는 새로운 통치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명제는 김정은 시기 북한 통치를 단순히 강압적 통제나 처벌의 강화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변화와 특징을 드러낸다. 본 연구의 학술적 기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법 연구의 분석 대상을 법 제도나 법률 규정이 아니라 법 담론의 차원으로 확장했다는 점이다. 둘째, 빅데이터 분석과 담론 분석을 결합하여 북한의 준법 담론을 통치기술적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김정은 체제 통치 방식에 대한 새로운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특히 준법 담론을 인지적 규율, 환경적 규율, 자기 규율이 결합된 담론 구조로 해석함으로써 북한 통치를 규율 중심의 통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도 분명하다. 북한연구의 특성상, 『로동신문』이라는 북한의 공식 기관지와 실제 사회현실 간의 편차 분석과 오류의 문제다. 또한 『로동신문』이라는 단일 매체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정책변화에 따른 법률 문헌, 정책 문서, 교육 자료 등 다양한 자료들에서의 확장 가능성에 주목하여 준법 담론의 변화와 확산 과정을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 투고: 2026.03.08. / 수정: 2026.04.08. / 채택: 2026.05.10.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심형일, 『주체의 법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2) 기타 자료

“강국 건설과 제도적 정비.” 『로동신문』, 2025년 11월 18일.

“교차생산규률준수에서 나서는 요구.” 『로동신문』, 2025년 10월 9일.

“국민적 자각.” 『로동신문』, 2023년 6월 21일.

“공화국헌법은 우리 국가의 존엄과 인민의 복리를 담보하는 강력한 무기이다.” 『로동신문』, 2025년 12월 27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께서 전국 분주소장회의 참가자들과 전체 인민보안원들에게 축하문을 보내시었다.” 『로동신문』, 2012년 11월 24일.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전국사법검찰일군열성자대회 참가자들에게 서한을 보내시었다.” 『로동신문』, 2012년 11월 24일.

“[규격화사업을 개선하는데 큰 힘을] 국가의 법으로 여기고있는가.” 『로동신문』, 2025년 12월 22일.

“농촌의 모든 가정을 사회주의생활문화 모범가정으로 꾸리자.” 『로동신문』, 2026년 1월 23일.

“법과 규율에 의거한 국가관리의 강화.” 『로동신문』, 2025년 11월 27일.

“불굴의 개척투쟁으로 전취한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새로운 려정의 줄기찬 전성과 도약으로 이어나가자.” 『로동신문』, 2026년 2월 26일.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기초: 자각성.” 『로동신문』, 2023년 5월 22일.

“사회주의헌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 『로동신문』, 2021년 12월 27일.

“[사회주의근로자로 떳떳히 살자] 집단의 사랑과 기대를 귀중히 여길 때.” 『로동신문』, 2026년 1월 31일.

“올바른 안내자,” 『로동신문』, 2025년 12월 27일.

“전국법무일군대회 진행.” 『로동신문』, 2012년 12월 6일.

“전면적 발전의 새시대가 제기하는 5가지 중요 요구를 깊이 새기자.” 『로동신문』, 2026년 3월 4일.

“〈전국준법교양자료전시회-2023〉 진행.” 『로동신문』, 2023년 8월 2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로동신문』, 2017년 9월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6호(2025년 12월 25일),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데서 모범적인 단위들에 모범준법단위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로동신문』, 2026년 1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83호(2026년 1월 25일), 함경남도 북청군에 모범준법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로동신문』, 2026년 2월 4일.

“주체의 정치헌장을 강력한 무기로 틀어쥐고 전면적국가부흥의 새시대를 힘차게 열어 나가자.” 『로동신문』, 2025년 12월 27일.

“준법식과 제품의 질.” 『로동신문』, 2024년 11월 12일.

“준법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대중운동열기 더욱 고조 올해에 들어와 전국적으로 2400여개의 단위가 모범준법단위칭호를 수여받았다.” 『로동신문』, 2025년 12월 27일.

“준법기풍이 몸에 꼭 배야 한다.” 『로동신문』, 2025년 12월 9일.

“중요한 공민적 의무.” 『로동신문』, 2026년 1월 16일.

“집단의 사랑과 기대를 귀중히 여길 때.” 『로동신문』, 2026년 1월 23일.

“제6차 법무일군대회 진행.” 『로동신문』, 2017년 10월 16일.

“제7차 전국법무일군대회 진행.” 『로동신문』, 2022년 9월 16일.

2. 국내 자료

1) 단행본

권영태, 『북한의 법교육』,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9.

박영자·김수경·현인에·황의정. 『북한의 주민 일탈과 법적 대응』. 서울: 통일연구원, 2018.

이상운. 『북한의 법제정법 연구』.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2021.

이은영. 『북한의 법이론 및 법체계 고찰』.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2018.

정은미·박영자·이철수.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정책: 복지와 통제의 메커니즘』. 서울: 통일연구원, 2021.

2) 논문

강채연. “김정은 집권 10년 통치담론의 동학: 계승성과 독자성, 도전요인.” 『국제정치연구』 제25권 3호(2022), 113-153.

강채연. “북한의 디지털 전환정책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8권 4호(2024), 3-29. <https://doi.org/10.21212/IASR.28.4.1>.

구갑우. “북한의 ‘우리국가제일주의’담론의 계보학.” 『현대북한연구』 제27권 1호(2024), 9-53.

김도균. “북한 법체계에서의 법개념론과 법치론에 관한 고찰.” 『법학』 제46권 1호(2005), 446-513.

김우영·안경모.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통제 유형에 대한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21권 3호(2018), 43-83.

송현진. “김정은 시대 ‘새 시대 농촌강령’의 등장 배경 및 내용.” 『통일과평화』 제14권 2호(2022), 117-162.

오기성. “구성주의 도덕교육론을 통해 본 북한의 사회주의도덕 연구.” 『도덕윤리과교육연구』 제22권 3호(2019), 87-113.

전영선. “‘사회주의 미풍양속’과 ‘준법기풍’을 통해 본 북한의 문화 검열.” 『통일인문학』 제84집(2020), 43-70.

3. 국외 자료

1) 단행본

Blommaert, Jan. *Discourse: A Critical Introduction*. Cambridge: Cambridge

- University Press, 2005.
- Dean, Mitchell R. *Governmentality: Power and Rule in Modern Society*. London: Sage Publications, 1999.
- Foucault, Michel. *Security, Territory, Population: Lectures at the Collège de France, 1977-78*. Edited by Michel Senellart. Translated by Graham Burchell. London: Palgrave Macmillan, 2007.
- Scott, John. *Social Network Analysis: A Handbook*, 2nd ed. London: Sage Publications, 2000.

2) 논문

- Fairclough, Norman. "Discourse, Social Theory, and Social Research: The Discourse of Welfare Reform." *Journal of Sociolinguistics* 4, no.2 (2000): 163-195.
- Lemke, Thomas. "Foucault, Governmentality, and Critique." *Rethinking Marxism* 14, no. 3 (2002): 49-64.

3) 자료

- Ferry, Laurence, Warwick Funnell, and David Oldroyd. "A Genealogical and Archaeological Examination of the Development of Corporate Governance and Disciplinary Power in English Local Government c.1970–2010."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109 (2023): 101466. <https://doi.org/10.1016/j.aos.2023.101466>.

Law-Abidingness Discourse and the Transformation of Governmentality in the Kim Jong Un Era

Kang, Chaeyeon

(National Institute for Peace, Unification and Democracy Education)

This article analyzes how the discourse of “law-abidingness” during the Kim Jong Un era has been structured and transformed, and how it relates to the governing techniques of the North Korean regime.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discourse of law-abidingness has emerged as a key discourse that goes beyond the simple issue of law compliance and increasingly defines behavioral standards across North Korean society. In particular, it forms a discourse network in conjunction with sub-discourses such as the law-abiding climate, law-abiding education, law-abiding consciousness, and socialist legal life, with the structure of this network changing over time in terms of its patterns of association and centrality. Second, in the early stage of Kim Jong Un’s rule, the discourse primarily appeared within a semantic network centered on law enforcement and regulation. However, after the

7th Party Congress, it was combined with the state's development discourse and expanded into a normative principle of state administration. After the 8th Party Congress, it showed a pattern of expanding to the overall living norms of society by combining with the daily production space. Third, the discourse of law-abidingness forms a triple regulatory structure consisting of law-abiding education, a law-abiding climate, and law-abiding consciousness. Through this structure, legal compliance is internalized through a staged process involving education, environmental conditioning, and self-discipline, thereby expanded into a normative principle of state administration.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expanding the analytical focus of North Korean legal studies from legal institutions to the level of legal discourse. By combining big data analysis with discourse analysis, it also reinterprets the governing style of the Kim Jong Un regime from the perspective of discipline-centered governing techniques.

Keywords: law-discourse of law abidance, socialist rule of law state, governing skills, social control, disciplinary politics, discourse analysis